유승민 "한국당 탈당자 대문 열려 있다"

"지지율 하락은 거품 빠진 것…지방선거까지 시간 충분"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여부 최대한 빨리 결심해주길"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7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으로 오겠다는 분에겐 전국적으로 샛문이 아닌 대문·정문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인재들이 바른미래당으로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너무 늦게 오면 곤란하니 오려면 빨리 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한국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누가봐도 늦은 타이밍에 온다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제가 한국당에 있는 의원은 물론 단체장들에게 지난해 가을부터 (영입) 의사를 타진했는데 그때는 한국당이 본거지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오래된 사고방식 때문에 별 반응이 없었다. 이제는 봄이 오고있고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니 올거면 빨리 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 유 대표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전국에 바른미래당 후보를 낼 것"이라며 "한국당은 건전한 보수로서 시민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했으면서 과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 작은 정당들을 굉장히 무시했다. 한국당과의 선거연대를 놓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 잡은 환노위원장과 3당 간사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그는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선거연대를 할거다, 보수야합을 할거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한 데가 민주평화당이었다"며 "오히려 두고보면 민평당이나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연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주선 공동대표 역시 "호남지역에서도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선거연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민평당은 지역주의를 선동해서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당과의 연합·연대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창당 2주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유 대표는 "창당 초기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크게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건 기대하던 거품이 빠진 상태라 보고 있고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100일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본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유 대표는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본인의 결심이 제일 중요하다. 단 너무 늦어지면 그러니 결심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안 전 대표가 결심을 한다면 저는 당대표로서 전폭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숫자로 말하긴 쉽지 않지만 바른미래당에 대한 지지나 추이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대구 등에서는 괜찮은 편"이라며 "지방선거는 여러 후보가 나오니 저희도 최대한 많이 얻어야 하고 서울시장은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선전부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 2박 3일 방남 일정을 마치고 27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경하고 있다.

여야, '김영철 방남' 놓고 갈등 최고조…2월 국회 '빈손' 우려

여야가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 후폭풍으로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에 2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빈속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청와대 앞 항의와 통일대교 연좌농성에 이어 26일 청계광장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규탄대회를 갖고 총력투쟁에 나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영철이 자행한 것은 전쟁 시에 우리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평화 시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전범이 아니라 그냥 살인범"이라며 "살인범은 사형시켜야 한다. 탄핵과정에서 주사파들이 내려와서 나라를 마지막까지 끌고 간다"고 비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을 정상적인 길을 통하지 않고 군사작전 도로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에 정상급 의전으로 모셨다"며 "과연 이게 대한민국 5천만 대통령이냐.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김정은의 친구냐"고 일갈했다.

이어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난 2014년 김영철과 회담 당시 반대가 없었다고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적군과 적군이 판문점에 앉아서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와 사과를 촉구하는 자리를 환영한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북측 회담 대표가 김영철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올림픽의 하나의 오점은 제1야당인 한국당의 행태였다"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려는 것은 색깔론 물타기의 저급한 속셈"이라며 비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또한 "새누리당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북한 최고실세 3인방의 참석을 환영했다"며 "한국당 논리대로라면 100배, 1000배 응징해야할 인물에 대해 환영했다"고 비꼬았다.

각 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만났으나 서로 고성만 오갔을 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상임위도 줄줄이 파행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주요 쟁점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뉴시스

민주당, 규제혁신 5법 발의…"신기술·서비스 규제 면제"

규제 신속 확인·임시허가·실증 위한 규제특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정책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지역특구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 혁신 5법은 당 주도로 당정청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며 "내일(28일)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정보통신융합 분야·산업 융합 분야·금융분야와 지역혁신산업(지역특구) 등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규제혁신 5법은 규제를 몇 개 발굴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행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 5법은 규제특례의 유형, 유효기간, 법령정비 등 사후조치, 규제특례 제한, 규제특례로 인한 손해배상, 특례 조건, 특례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제 특례의 유형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이다.

관련 법 존재나 법상 허가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규제 여부를 30일내 회신하도록 규정했다. 법 공백·불합리 경우 시장출시 목적으로 우선 허가한 뒤 관계기관이 관련법을 정비하게 된다.

아울러 법 공백·불합리·불허 등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특례기간 동안 관련법령 정비를 검토하도록 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각각 '2년 이내'로 하고 2년 이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특례는 제한했다.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특례를 받아 제공되는 신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